2016년 OECD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개발포럼(GGSD) 참석 결과보고

('16.11.23,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I. 회의명

○ 국문 : OECD 2016년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개발 포럼

○ 영문 : OECD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GGSD) Forum 2016

II. 개최일시 및 장소 : 2016. 11. 9. - 11. 10.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III. 주관기관 : OECD 환경국/지역개발정책국

IV. 참석자

○ 한국대표단 :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 김남혁 과장, 이슬 사무관, 주 OECD 대표부 김은경 1등 서기관

○ 여타국 : OECD 회원국, 국제기구,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일반참관인 등

V. 포럼 개요

○ 포럼 주제 : 도시의 녹색성장, 공간계획 및 토지이용(Urban green growth, spatial planning and land use)

[11.9(수)]

○ 개막 세션

○ 세션 1 : 현존 토지 이용정책이 포용적 발전과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

[11.10(목)]

○ 세션 2 : 도시 확장 - 해결되지 않은 과제

○ 세션 3 : 녹색성장 도전에 대한 도시의 대응

○ 부대행사 : 역동적 아시아 도시의 녹색성장 : 관련 OECD 보고서 출간 행사

○ 병렬세션

A. 복원력 있는 인프라 : 혁신적인 접근방법

B. 도시의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성과 측정

C. 포용적 도시 그리고 녹색 도시를 위한 윈윈해법

D. 토지사용에 대한 조세정책의 효과

○ 폐회 세션

VI. 관찰 및 평가

○ 참석자들은 SDGs와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도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도시의 녹색성장은 전통적인 도시정책인 공간이용 계획 및 규제, 주택공급, 교통정책 뿐 아니라, 에너지 정책, 대기 · 폐기물 · 물 관리 등 환경정책, 그리고 조세정책과도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됨.

- 또한 성공적인 도시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 지역, 지방 정부간 일관성 있는 정책 조율과 도시 거주자들의 참여가 필요

○ 아울러, 서울시의 에너지 효율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멕시코시티, 파리, 프라하 등의 도시 녹색성장 추진 사례 등이 공유되었으며, GGGI가 지원한 베트남의 녹색성장 국가전략, 캄보디아의 녹색도시 개발계획 등이 개도국 모범사례로 소개됨

○ 금번 포럼을 통해 도시의 포용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의견들이 폭넓은 범위의 참석자들에게 공유된 바, 향후 OECD 국가들의 도시정책 추진과 개도국들에 대한 녹색도시 개발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VII. 주요 언급 내용

1. 개막세션

※ 좌장 : Simon Upton OECD 환경국장

가. Patrick Klugman, 파리 부시장

○ 파리시는 파리협정 이행 정책의 일환으로 △대기 오염에 대한 대응 정책, △대중교통 이용 촉진 정책, △디젤 연료 사용 금지 정책 등을 펼치고 있음.

○ 지난해 말 파리시와 수도권의 기후 · 대기 · 에너지 등의 정보가 수록된 파리 2050지도를 발간함.

- 에너지 사용이 적은 지역에서 많은 지역으로 에너지를 전송하고, 도시 내 순환경제를 자극하는 경제모델을 기후정보와 결합하여 제공가능

나. Stanley Yip, Pecking 대학교 교수

○ 중국의 도시화 속도는 1978년 17.9%에서 1985년 24%, 2000년 36.2%, 2015년 56.1%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은 2014-2020 신도시화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중 주요 도시 녹색 성장 목표로는 △도시화율 60% 달성, △녹색 지역 비중 38.9% 달성, △도시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 에너지 비중 13% 달성, △신축 건물의 50%를 그린 빌딩으로 인증 추진 등이 포함됨.

○ 아울러, 중국의 2016-2020 5개년 계획은 △배출 피크(peak)를 2030에 달성하는 목표와 △2017년 국가 탄소 거래시장 운영, △중국 기후변화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다. Christian Kastrop, OECD 경제부 정책연구과장

○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은 △경제성장, △포용적(inclusive), △녹색의 3가지 축(pillar)으로 구성됨.

○ 지난 10년간 20개 국가에서 이루어진 조사의 60%가 토지 사용계획을 언급하고 있으며, 전형적으로 규제 폐지에 관한 것인데 이는 그간 공간 이슈가 경제 성장적인 관점에서 다뤄져왔음을 보여주는 것임.

○ 이제는 도시 계획의 잠재 비용(shadow price)을 고려하고, 환경적 및 사회적 결과를 고려하는 등 단순히 성장에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추세임.

라. Rolf Alter, OECD 공공 거버넌스 및 지역개발 과장

○ 2주전 개최된 제3차 유엔 해비타트 총회에서 New Urban Agenda가 채택되었고, 이는 도시 정책이 무엇을 향해가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것임.

○ 도시는 이번 세기 말 인구의 85%가 살게 될 곳으로 우리는 그러한 도시가 성장하는 엔진임을 알고 있으며, 또한 도시는 일자리와 에너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우리가 논하는 도시 녹색 성장은 형평의 문제이기도 함.

2. 세션 1 : 현존 토지 이용정책이 포용적 발전과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

※ 좌장 : Paul LeBlanc, OECD 지역 개발 정책 위원회 의장

가. Joaquim Oliveira Martins, OECD 지역개발 정책국장

○ 포용적인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토지이용 정책은 지속성(sustainability), 심미성(beauty), 경제성(affordability) 측면에서 균형을 추구해야 함.

○ 토지와 부동산은 지금까지 자산의 가장 중요한 형태였으나, 많은 국가에서 인구 당 토지 이용은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주택가격이 급상승한 바, 제한적인 토지이용 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함.

○ 공공 공간(public space)은 고밀도의 환경에서 웰빙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질적 수준을 달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유동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이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적 토지 이용 계획과 사적 토지 이용 수요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음.

나. Philip McCann, Groningen 대학 교수

○ 토지 이용 정책, 계획 정책, 그리고 다른 정책들 간의 상호작용은 복잡하며 자본가, 건축가, 경제학자, 가정, 또는 정책입안자들의 제도적,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차이가 이러한 정책들에 영향을 미침.

○ 토지 시장은 항상 정치 경제적 문제이며, 토지 시장과 토지 이용 정책은 다양한 목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므로, 시장 인센티브는 가정,

상업적 이해관계자 그리고 우선순위 공공정책과 연계되어야 함.

○ 도시 계획은 인구 규모 및 인구 구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야기하며, 인구 감소, 인프라 과잉 공급, 유지 및 감가상각 비용 증대 등은 도시 계획의 실패 요인이 됨.

다. Jana Plaminkova, 체코 프라하 시의원

○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 모두를 고려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으로 프라하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토지 분석 평가 2016(Land Analytical assessment 2016)'을 마련하였음.

○ 프라하의 '전략 계획 2016(Strategic plan 2016)'은 새로운 도시 부흥을 제안하고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을 지원하는 것임.

○ 프라하는 새로운 토지사용 계획인 '메트로폴리탄 계획(Metropolitan plan)'을 준비 중인바, 이는 새로운 도시성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개발을 도시 내부 재개발에 집중시키는 것임.

라. Dominique Bureau, 프랑스 환경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제위원회

○ 프랑스는 새로운 국가 웰빙 지수로서 예상 수명, 빈곤 지수 등 10개 지수를 채택하였으며, 새로운 도시화 계획(New Urbanization Plan)을 수립하였음.

○ 파리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를 에코시티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또한 생물다양성법(Biodiversity Law)을 제정하여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할 시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마. Salin Geevarghese,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

○ 미국은 연방 정부로서 도시 계획, 토지이용 및 녹색성장은 일차적으로 주정부의 책임 하에 있으며, 연방 정부는 정액교부금(block grants)의 형태로 주정부의 녹색 인프라 구축 및 녹색 성장 정책 등을 지원함.

- 주정부들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복구를 위한 정액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보다 녹색 성장 목표와 정책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도시 재건을

디자인하려 경쟁하고, 이러한 경쟁은 주정부가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압력이 됨.

○ 미국은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하향식(top-down) 정책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방정부는 형평성과 경제적인 주택 공급,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 등을 포함하는 거주적합성(livability) 원칙을 발표하고 주정부에게 이러한 원칙에 따라 도시 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하고 있음.

마. Shahar Solar, 이스라엘 환경부

○ 이스라엘의 매우 엄격한 계획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 마스터 플랜, 지역 계획(regional plan), 지방 계획(local plan)으로 구성되며, 서로 일관성 있게 구축되어야함.

○ 이스라엘은 저금리로 인해 주택 투자가 확대되어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으며, 토지 이용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도시세(city tax)를 내야 하는 등 도시 녹색성장에 제한이 있음.

3. 세션 2 : 도시 확장 - 해결되지 않은 과제

※ 좌장 : Edward Hearnshaw, 뉴질랜드 환경부 수석 정책 분석가

가. Jan Brueckner,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

○ 도시는 인구 증가, 소득 증대, 교통 편리성 증대 등 주로 긍정적인 이유로 공간적으로 성장하지만, 시장 실패는 과도한 공간 확장을 야기함.

○ 이러한 시장 실패는 첫째로 자동차 통근자 증대로 인한 도로 혼잡, 두 번째로 도시 교통 및 주거용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오염 산정 실패로서 이러한 시장 실패가 도시를 과도하게 확장하게 만듦.

- 이러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혼잡통행료(cogestion toll)는 도로 혼잡을 막고, 오염도 줄일 수 있지만, 오염 감소를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서 가솔린세 증대를 들 수 있음.

○ 녹지(open space)의 효용을 무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실패에는 개발세(development tax)가 대책이 될 수 있으며, 그린벨트를 설정할 경우 일부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도시의 밀집도를 높이는 효과는 부족하므로 좋은 해결책은 아님.

나. Marie Cugny-Seguinl, 유럽 환경 에이전시

○ 유럽 도시 확장은 낮은 밀도의 도시 지역이 늘어나고, 비연속적이고 산재된 도시 지역 현상이 증대되고 있으며, 도시 지역 확대가 인구 성장을 훨씬 앞지르는 등의 특징을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도시화는 거주지의 분절, 토지 피복(sealing) 등으로 인한 토양 기능 상실, 물 순환 구조 및 수질 변경, 미세기후(microclimate) 환경 변화로 인한 열섬효과, 대기 오염, 소음, 온실 가스 유발 등 환경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누적적 효과를 야기함.

○ 이러한 도전 요인들은 1) 도시 내 친환경 시스템 구축, 2) 사회 및 경제 단위와 협력, 3) '회색(grey)' 시스템 개선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음.

다. Elena, Irwin,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환경 · 도시 경제학자

○ 미국에서 도시 확장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일인 가구용 주택 개발 확대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도시 확장은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신규 일인 가구용 주택 수를 분석하였음.

○ 일인 가구일수록 도시 중심부에 살아야 할 유인이 적어 보다 저렴한 도시 주변 지역의 주택으로 이동하게 되나, 이는 녹지효용(open space benefit)을 감소시키고 충분한 도시 집중도를 달성하지 못하게 함.

○ 도시 규제를 통해 주변 지역 개발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도시 집중을 강화하고 도시 과잉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공공투자로 볼 수 있음.

라. Julien Salanie, 프랑스 Saint-Etinenne 대학 부교수

○ 공간 규제는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공간 정책은 도시 밀도, 생산성, 토지 가격 등 의도하지 않은 경제적 효과 또한 유발할 수 있음.

- 환경 보호와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함.

마. Walid Oueslati, OECD 선임 경제학자

○ 전 세계적으로 도시 외곽이 점점 확대(urban scrawl)되고 있으나 특히 유럽, 북미, 그리고 오세아니주에서 두드러지고 있음.

○ 인구 밀도, 분열도(fragmentation), 분산도(dispersion) 및 다핵도(polycentricity) 간 비중 등이 도시화를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

4. 세션 3 : 녹색성장 도전에 대한 도시의 대응

※ 좌장 : Vincent Fouchier, OECD WPURB(Working Party on Urban Policy) 의장

가. Rosario Robles Berlanga, 멕시코 농업부 장관

○ 멕시코시티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 도시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하였고, 도시 크기는 7배나 증가하는 등 거대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비계획(unplanned), △불평등, △기후변화 취약성, △낮은 주거 밀도 등의 도전요인들을 가지고 있음.

○ 공공재로서의 도시를 의미하는 도시권은 국가 계획 정책과 국가 규제 정책들에 반영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 계획 및 효율적 관리, △지속가능한 주거, △공공 공간, △도시 환경 관리, △도시 통합이라는 5가지 분야에서의 행동강령을 마련하였음.

○ 멕시코시티는 국가 적합 감축 행동(NAMA,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을 마련하였으며, 녹색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 녹색 대출(green mortgage), 에코카사(ecocasa)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나. Hong Vinh Hung, 베트남 건설부

○ 2012년 베트남 총리는 녹색성장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Green Growth)을 마련하였고, 2014-2020년 국가 행동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였음.

- 베트남은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를 과거보다 확대하고 있으며, 도시 녹색 성장에 보다 집중하고 있음.

○ 베트남의 도시화 과정에서의 도전과제는 △토지 이용의 일관성, △부적절한 도시 개발 모델의 이행, △도시 인구의 급증에 따른 도시 거버넌스 및 도시 관리 효율성 감소 등이 있음.

다. 김창범, 서울시 국제관계 대사

○ 서울시는 원전하나 줄이기 종합대책(Sustainable Energy Action Plan One Less Nuclear Power Plant)을 마련하여 2012-2014년 1차 시기(phase1)에 2백만 TOE 감축을 달성하였고, 2014-2020년 2차시기(phase2) 4백만 TOE 감축 목표를 설정 하였음.

- 서울시는 이외에도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2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천만톤 감축 목표 설정

○ 이밖에도 서울시는 태양열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Solar City, Seoul'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시민 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포용적인 기후 대응을 위해 노력 중임.

라. Edoardo Croci, 이탈리아 녹색 경제 연구소

○ 도시 활동의 정의와 측정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도시 관련 측정 지표 또한 계획, 평가, 관리, 예측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됨.

마. Adarsh Varma, BuroHappold Engineering

○ 녹색 번영 도시를 위한 자립 경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스마트 플래닝은 조달 및 수익 모델에 기술 및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실현 가능함.

○ 도전과제들로 도시 신용도 취약, 저탄소 녹색 성장 계획 능력의 부족, 영향력 있는 도시 투자 집단의 참여 부족 등이 있음.

바. Evelyn Nacario-castro, 필리핀 Ramon Aboiti Foundation 총재

○ 필리핀은 중심 및 주변 도시 간 연계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메가세부(Mega Cebu)'라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대도시 거버넌스를 위한 중점 분야로 △통합 개발 및 공간 계획, △교통 및 대중교통 관리, △토양 및 수질 관리, △수자원 공급 및 우수 관리, △재난 위험 감축 및 관리 등을 설정함.

- 이를 위해 Vision 2050 설정,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로드맵 마련, 환경 및 자원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연구 및 컨퍼런스 개최, 파트너십 구축 등을 노력 중임.

5. 병렬 세션 A : 복원력 있는 인프라 : 혁신적인 접근방법

가. Keywan Riahi, 호주 IIASA 에너지 프로그램 디렉터

○ 향후 15년간의 투자가 앞으로 수십년 동안의 에너지 인프라 구조를 형성할 것이며, 2℃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석탄 에너지 인프라가 탄소 포집 및 저장 없이 전체 에너지 인프라 구조에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함.

○ 도시 거주자일수록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나타나는데, 관련 인프라의 결여는 비재정적(nonfinancial) 비용으로서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음.

- 즉, 인프라 이용가능성이 구매 대상에 대한 소비자의 관점에 영향을 미치므로, 에너지 사용 패턴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

나. Julie Rozenberg, 월드 뱅크 경제학자

○ 올바른 의사 결정은 불확실성과 의견 불합치에 도전을 받게 됨.

- 전통적인 계획 설정 방식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에 착안하여 단기 최적 결정을 내리고 우리의 결정이 예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양태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는 △환경이 안정적이고, △예측이 용이하며, △이해관계자들 사이 의사 합치(consensus)가 이루어졌을 때 잘 작동함.

○ 그러나 불확실성 하에서는 이용 가능한 전략을 먼저 파악하고, 이러한 전략의 취약성을 규명한 뒤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략 적응 방안을 개발하는 양태로 이루어지게 됨.

○ 리마와 콜롬보의 사업 추진 결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불합치는 가장 큰 불확실성을 야기하게 되므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임.

다. Lola Vallejo, OECD 정책 분석가

○ 인프라를 기후 복원적(climate resilient)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2015년-2030년 동안 세계 인프라 투자 규모가 90조달러에 이르러야 함.

○ OECD의 연구 주제는 어떻게 정부가 인프라의 기후복원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와, OECD 회원국의 국가 차원의 적응 행동의 양태는 어떠한가임.

라. Pheakdey Heng, 캄보이다 GGGI 정책 리더

○ 캄보디아는 2001년 이래 연평균 4.4%라는 빠른 도시화율을 달성하고 있으며, 도시 부분이 캄보디아 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수자원 공급, 위생, 폐기물 관리, 대중교통, 에너지 서비스 등 필수 인프라가 도시화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며, 이 결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유발되고 있음.

- 특히 도시 공간 관련, 건축 규제 부재, 무분별한 도시 확장, 필수 자연자원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

○ 캄보디아의 녹색 도시 전략 계획은 경제 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시키고, 사회적 통합 확대, 빈곤율 감소 그리고 도시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함.

- 자연적, 기후적 그리고 다른 모든 위험에 대한 도시 복원력을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여 사업 유인(attractiveness)을 높이는 것도 목표

- 동 계획 수립에 사용된 방법론을 다른 도시에도 적용 가능할 것

6. 폐막 세션 : 병렬 세션 결과 보고

가. Doug Frantz, OECD 사무처장

○ 금번 회의를 정리하며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공간 계획과 토지 이용 정책이 핵심 요소임을 재강조함.

- 녹색성장이 도시의 성장에 비용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도시의 무분별한 성장이 대기오염, 교통정체 등으로 인해 도시의 매력을 감소시킨다는 분석이 금번 포럼에서 제시되었음.

- 도시 정책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긴밀히 연계(alignment)되어야 하며, 또한 도시 정책의 부문별 수평적 통합 뿐 아니라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수직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법적, 정책적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

- 아울러 중앙 및 연방 정부 차원의 기술, 지식 및 재원에의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

- 2017년 GGSD 포럼의 주제는 녹색 해양 경제(Greening the Ocean Economy)이며, 2017년 말경 개최될 예정

나. Luiz De Mello, OECD 공공거버넌스, 국토개발 부국장

○ 도시 차원의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거버넌스의 개선이 중요하며, OECD 공공 거버넌스국 차원에서는 기존의 부문별로 고립되어(Silo Approach) 추진되었던 녹색성장 전략을 통합된 다차원적, 다부문적 목표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이를 위해 OECD는 각국 도시별로 다른 법적, 제도적 틀의 통합을 지원하고, 정부 내에서의 수직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거버넌스 부문에서의 다차원적 투자에 관한 권고안*을 2014년 제정하였음

  * Recommendation of the OECD Council on Effective Public Investment Across Levels of Government

- 향후 추진 계획인 작업은 도시 개발과 관련된 부문에서의 정책 효과를 규명하고 이를 거버넌스 및 국토 개발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컨대

조세 정책의 경우 지방세 중 사업세와 소득세의 세율이 각기 다른 양상의 도시 개발을 촉진하는 유인을 부여할 수 있음

다. Shardul Agrawala, OECD 환경국 과장

○ 지리공간적 미시자료(Geospatial Microdata)의 수집 및 처리를 통해 공간 정책 분석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시 확장(urban sprawl)의 측정 지수를 다차원적으로 측정(Multidimensional Metric)하고 지역 차원의 대기오염, 삶의 질 등 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OECD 차원의 실증 연구로 도시 구조와 삶의 질 지수 등 국가별 가계 설문조사(Cross-country Household Survey)를 결합하여 도시의 밀집화가 삶의 질 및 소득 등 경제적 변수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에 대해 규명하는 작업을 수행 중

- 향후 수행할 중점 작업은 도시의 개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집단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compensation mechanism)을 설계하고, 교통 분야에서 최신 기술(자동화 고속도로 등)과 주차 관련 정책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규명하는 것임.